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박승우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본 논문은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담론을 '경제공동체 담론',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대안체제 담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그 주된 내용 및 주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들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상 네 가지 담론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교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라 명명한 새로운 유형의 담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외연,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격,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정체성 형성의 방법론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논의와 관점 중 일부를 취사선택하고 다듬어 이 새로운 담론 유형의 전제로 삼았다. 이는 그간 각각의 분과학문의 경계 내에 머물러 있던 동아시아 담론들 사이에,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보다 전향적이고 역동적인 학문적 소통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정체성

I. 머리말

지난 20년간 '동아시아'란 주제는 우리 학계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 중 하나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연구주제도 드물거니와 이를 의제로 다루는 학문영역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을 고루 포괄할 정도로 폭넓은 외연을 자랑한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하겠다. '동아시아 담론'이라 부를 만한 학문적 논의는 초기에는 문학·역사학·철학 등 인문학자들, 특히 한·중·일 3국의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이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말부터는 동아시아 발전문제를 다

* 본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병곤, 박사명, 최종고 교수와 익명의 논평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루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나름대로의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에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처럼 ‘동아시아’란 화두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의를 정리하여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고, 이들 각 유형의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의 주장하는 바, 그리고 각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에도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박승우, 2008a; 2008b), 이 글에서는 그 이후에 제기된 논의를 추가하고 각 유형별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강하는 한편, 이전에 제시한 유형 분류를 조금 수정하고 새로운 유형을 첨가하여 논의를 보다 심화시켰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에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1990년대에 동아시아를 다루었던 대부분의 논자들에게 동아시아는 한·중·일 3국을 의미하는, 매우 협의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교 문화권’이나 ‘한자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만과 싱가포르, 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베트남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동북아시아를 동아시아와 등치시켜 개념화하는 경향은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동아시아를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를 모두 포괄하는 광역의 지역으로 개념화할 것이다.

한편, 그 반대로 동아시아를 이보다 훨씬 더 넓게, 아시아 또는 동양과 등치시키는 논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동아시아를 서구의 대립항(對立項)으로 개념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서구의 역상(逆像)을 본다. 이처럼 동아시아를 동양 또는 비(非)서구로 폭넓게 개념화할 경우, 우리의 ‘동아시아 담론’은 ‘아시아 담론’ 또는 ‘동양 담론’도 되는 것이다.

II. 동아시아 담론의 제 유형과 등장 배경

이전의 글에서 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동아시아 담론을 ‘경제공동체 담론’, ‘지역패권주의 담론’,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대안체제 담론’ 이상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박승우, 2008a; 2008b). 그러나 이 중에서 ‘지역패권주의 담론’이란 유형은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 실제로 제기된 다양한 동아시아 관련 논의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 안보공동체론’이라 부를 수 있는 논의를 포함하고, 이를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약간은 느슨한 이름을 붙여 재범주화해 보기로 한다.

이들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부터 나타난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정치경제적 변화들, 즉 ① 자본주의의 세계화 및 지역화 추세의 심화, ② 냉전구도의 해체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③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중국의 경제적·정치군사적 급부상, ④ 미국과 일본의 외교·군사적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이 그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 외에도 좀 거슬러 올라가서 ⑤ 1970~80년대의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소위 ‘네 마리 작은 용’)의 경제발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역내 교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도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⑥ 1990년대 말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⑦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199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과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3(한·중·일) 체제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점도 우리나라 동아시아 담론의 발전에 중요한 배경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경제공동체 담론’의 등장에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세계화의 심화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중국의 개방과 경제적 부상,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이를 계기로 한 아세안+3 프레임워크의 가동(①③⑤⑥⑦) 등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지역패권주의 담론’ 또는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의 등장에는 동아시아에서 냉전구도의 해체와 중국의 경제적·군사

표 1 198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담론 | 역사적 계기 및 국면 | 담론의 내용 |
|-------------------------------|---|--|
| 경제공동체 담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의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의 심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의 팽배 EU, NAFTA 등 세계 전반적인 지역주의 추세의 강화 1990년대 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건설 추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추구 세계화의 추세·신자유주의 조류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적 대응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기제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모색 자유주의적·기능주의적 관점 |
| 지역 패권주의 담론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이후 전후 냉전체제의 붕괴 중국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과 경제적·군사적 급부상 미국 패권의 부분적 퇴장 및 역할 축소(동아시아 지역과의 '거리두기' 및 중국에 대한 '외곽 포위')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군사적 재무장,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추구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신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권이론의 관점 중국·일본의 신(新)패권주의의 발현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국의 소(小)패권주의적인 억압된 욕망(카타르시스)의 배출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동북아) 공동체 세력균형이론의 관점 중국의 팽창과 위협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미국의 '거리두기'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 추구 현실주의적 관점 |
|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과 자신감 동아시아 발전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연구 유행 아시아적 가치론, 유교 자본주의론 리관유, 마하티르 등에 의한 (동)아시아의 독자성, 특수성, 수월성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에 특수한 문화 공동체 상정 '아시아적 가치', '유교 문화권' 담론 동아시아에 특수한 정치·경제체제 추구 (동)아시아적 자본주의 담론 (동)아시아적 민주주의 담론 |
| 대안체제 담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이래 중국의 문화적 개방 중국 지식인들의 동아시아(중국 이외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 대두 한·중·일 지식인들의 교류 증대 국내 일부 신좌파 지식인들의 새로운 의제 추구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의제 상실 대안적 의제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 전체의 극복이란 주제 대두 과거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재해석 다케우치 요시미에 대한 재발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 서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비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장(場)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추구 국가 주도의 지역 공동체 형성('국가주의')에 대한 반대 동아시아 역내 지식인들의 교류 및 연대(지식인 공동체 형성) 추구 동아시아 역내 시민사회 등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연대'(동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체) 추구 |

출처: 박승우, 2008a; 2008b.

적 부상,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의 변화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여기에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3 체제의 지역주의 움직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②③④⑦). 한편,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의 등장에는 중국의 체제 개방과 경제적 성공 및 ‘동아시아로의 귀환’,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으로 높아진 서구에 대한 자신감 등이 그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고(③⑤), ‘대안체제 담론’의 등장에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외에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화와 금융자본주의의 폐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 등도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①②③).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유형의 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되, 여기에 새로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유형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존의 담론들이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들 비판적 논지 중 필자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새로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것을 유형화했다. ‘동아시아공동체’란 명칭이 이들 새로운 생각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과연 적절한지 아직은 유보적이긴 하나, 그 적절성 여부는 이후의 후속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네 가지 유형의 담론을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III. 경제공동체 담론

동아시아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글로벌 수준에서는 자본주의의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 및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심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유럽과 북미·남미 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지역주의(regionalism)의 경향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지역 수준에서는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역내 교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크

게 증대하기 시작했다는 점, 셋째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냉전구도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재화와 금융,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면서 각국 간, 지역 간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 경제를 필두로) 지역 내에 단일한 자유무역지대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거센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들이 1990년대 말에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귀결되면서 (동남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 무역과 금융·외환·자본 등 여러 영역에서 정책 공조가 절실했던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담론은 크게 ‘동북아 경제공동체론’과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廣域)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의 등장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배경 요인들 외에도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안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적 변화도 또한 크게 작용한다. 반면에 후자(後者)의 등장에는 1997~98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핵심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담론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초기에 주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제기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아세안 국가까지 포괄하는 광역의 지역 경제공동체 논의로 확장되었다. 아래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공동체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성의 가능성 및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국제경제·국제통상 분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김규륜, 1992; 손병해, 1992; 이창재 외, 1994; 정인교 외, 1999; Cheong, 1999 등). 이들의 논의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김세원, 2003; 김홍중 외, 2005; 박제훈, 2004; 안충영 외, 2003; 이창재 외, 2005; 한국비교경제학회, 2005 등), 이들은 대부분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고) 적지 않다고 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물론 가장 큰 쟁점이 될 지점은 그 경제통합의 수준과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대부분 역내 국가 간 양자간·다자간 FTA 체결을 경제공동체 구축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에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을 제안하거나(정인교 외, 1999; Cheong, 1999), 또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한다(이창재 외, 2005). 이들 중 일부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외연을 동북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상당히 유연하게 규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동남아 또는 아태지역 전반까지 포괄하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한다.

한편, 동아시아를 동남아를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아세안+3의 틀 내에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논의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는 1997~98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¹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세안 이 한·중·일 정상들을 초치하는 형식으로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부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아세안+3’ 프레임워크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초기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금융위기 이후 이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주로 통화 및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 위주로 이루어졌으며(문우식 외, 2000; 조종화 외, 2001; Kwack et al., 2003; Moon et al., 1999; 2000), 이러한 연구주제는 최근까지도 계속 다뤄지고 있다(박영준 외, 2010; 이충열 외, 2008; Moon et al., 2006; 2008).

또한 금융통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과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논의하는 연구들도 최근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등 아세안+3 프레임워크의 심화·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권율 외, 2005; 박번순, 2010; 박인원, 2001; 손병해, 2003; 이창재, 2005;

¹ 물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의 등장에는 금융위기 말고도 보다 장기적·근원적 배경이 작용한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에 뒤이어 동남아의 선발 개발도상국이라 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여기에 베트남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개발에 뛰어들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룬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 교류와 상호의존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 발생의 단기적·직접적 요인이라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역내 교역의 증대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이창재 외, 2009; 정인교 외, 2009; Park, 2009). (동북아 경제공동체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대부분 FTA 체결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광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공동체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경제학자들인데 반해, 드물게 정치학자인 이남주(2005a; 2005b)와 임성학(2005) 등도 이 담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이남주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미국처럼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소국들과 많은 저발전국을 포함하고 있는 ASEAN에 의해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이 주도되고 있는 것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진단한다(이남주, 2005a: 79).

아래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담론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경제공동체 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제적 통합을 지향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발라사(Balassa, 1961)는 지역 경제통합의 전개 단계를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의 형성,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경제연합(economic union), 그리고 ⑤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²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이 중 어느 단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동아시아에서 EU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다음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동아시아에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연구자들은 대체로 FTA 협정체결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성, 그리고 공동의 통화기금 등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박변순(2010: 136)은 “엄청난 경제 발전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단일한

²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역외의 국가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공동시장’에서는 역내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다. ‘경제동맹’ 단계에서는 거시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화가 단일화되고 재정정책이 통일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를 가진 경제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면서 결국 역내 국가 간에 FTA부터 체결하고, 여기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금융협력 및 정부 간 조정 기구를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2012년부터 아세안+3 전체를 묶는 FTA 협상을 개시하고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East Asian Monetary Fund)을 설립하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하는 보다 광역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이 제안된다(박변순, 2010).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논의가 대부분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FTA 체결이나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부터 셈한다. 그러나 과연 이처럼 단기적·산술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추수가 우리나라의 장기적·궁극적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데 있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권율 등(2005: 199-200)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ASEAN+3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내의 개발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역내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ASEAN 회원국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에 대한 지원은 세계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고, 국제협력부문에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또 다른 ‘중심주의’의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 의 지역 공동체 구축 기도가 ‘동아시아 중심주의’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타 지역과의 대결을 통해, 타 지역을 배제해 가면서 동아시아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라면(그것도 떠오르는 중국을 앞장세워),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제3세계의 저개발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희생 위에, 그리고 그 주민들의 빈곤과 소외 위에 건설될 동아시아 공동체라면 과연 그 도덕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닫힌’ 체제인가, 아니면 ‘열린’ 체제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과 관련하여 재론하기로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아래에서 논의할 ‘대안체제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담론’에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담론은 기본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하고, 이 틀 내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 변영을 논의하고 있다. 과연 서구 자본주의 체제는 아무런 성찰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만한 인간적·진보적 체제인가. 동아시아의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막강한 경제공동체가 불철주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마의 공장’이 되어 돌아갈 때, 그것이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안체제 담론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거론할 것이다.

IV.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안보적 측면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역시 1990년대 초부터의 일인데, 이에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급부상,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과 아세안의 대응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 개혁개방 이후 ‘도광양회(韜光養晦)’해 오던 중국이 냉전체제 붕괴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에 뛰어들었고,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군비 증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군사적 재무장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열도 내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의 영향력을 외부로 투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아시아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퇴장하여 일시적인 패권의 공

백 상황이 발생하지³ 이를 매우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각축이 전개되었고, 기존의 단극적(單極的) 패권안정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에 대한 요구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1994년에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출범하고, 1997년부터 아세안이 한·중·일 정상을 초청하여 아세안+3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과 안보공동체의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초기에는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논의와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과 중국이 아세안+3 체제의 구축을 계기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 한국 또한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아세안+3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논의에 초창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 학계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더불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내건 ‘동북아 균형자론’은 당시 (이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동북아 안보공동체’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 학계 내부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군사안보적 측면의 다자간 협력과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과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지역질서를 논하는 세력균형론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1990년대 중엽부터 동북아 안보공동체 논의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지역 안보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좀 더 많은 논의를 할애하고자 한다.

³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은 서태평양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즉 과거 사회주의권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전선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아시아 대륙에 보다 근접한 선에서 그어졌다면,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지역 패권 의욕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연결하는 광역의 대중국 방어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1년 9·11 사태로 인해 이러한 전략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 현실주의적 관점의 동아시아 담론

국제정치학·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관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부터 다루어 보기로 한다. 국내의 정치학계에서는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regionalism) 추세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⁴ 동(북)아시아에 다자간 정치적·군사안보적 협력체제의 형성과 지역통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후자의 대부분은 그 이론적 관점을 ‘현실주의(realism)’ 또는 ‘신(新)현실주의(neo-realism)’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전재성, 2008 등). 이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또는 거의 유일한) 행위자로 국가(state)를 중시하며,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시아 지역질서를 기본적으로 패권주의 또는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실주의는 아세안이 1994년 ARF 창설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중국과 일본이 1990년대 말부터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에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 각국이 다자주의적 안보 논의와 협력체제 구성에 참여하는 이유를 미국의 퇴장 또는 패권 하락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의 움직임이 격화된 결과로 설명한다(최영중, 2001). 이 중 어떤 이들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나서는 이유를 기본적으로 패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읽는다. 즉,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일시적 퇴장 또는 ‘거리두기’를 한 후 발생한 힘

⁴ 지역주의(regionalism)란 어떤 지역(여러 국가를 포괄하는)에 다자적인 교류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치 및 군사·안보적 협력과 안보공동체의 구축도 포함된다. 지역주의의 주된 행위 주체는 국가기구로,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는 국가가 위로부터 주도하는 움직임이다. 반면에 지역화(regionalization)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의존의 증대를 말하는데, 이는 아래로부터의 추동력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의’와 ‘지역화’의 구분에 대해서는 손열(2006), 펨펠(Pempel, 2004) 등 참조.

의 공백 상태를 자신이 주도하여 메우려는 지역패권 추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조명현, 1994). 일본의 지역주의 참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김기석, 2006).⁵

그러나 다수의 관찰자들은 역내 국가들이 다자간 안보협력에 나서는 이유를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중국이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이유를, 일본이 미·일 동맹을 통해 지역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데 대한 견제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고(남궁곤, 2006), 일본이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이유 또한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의 지역패권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것이다(김기석, 2006; 김성철, 2006; 문정인 외, 2010; 이기완, 2010). 한편, 중국의 지역주의 참여 이유를 좀 더 글로벌한 수준에서 보자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다자간 지역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유일패권인 미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균형을 기하려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김재철, 2008; 이태환, 2008).⁶

이 밖에도 일본이나 아세안이 중국을 다자간 협력의 틀에 끌어들이려는 이유를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할 수도 있다. 유럽통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독일을 EU라는 지역주의의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유럽의 패권국가로 다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즉, “지역 패권국을 지역주의의 틀 안에 묶어둠으로써 패권국의 자유로운 힘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김유은, 2005: 240-241),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현상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⁵ 미국이나 일본 정부 또한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역주의 참여를 지역패권의 추구로 간주한다(김기석, 2006; 남궁곤 2006). 한편,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패권야욕을 염려하는 입장은 국제정치학에서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이나 여타 사회과학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백영서, 2005; 전형준, 1997; 최원식, 1993).

⁶ 그러나 ‘화평굴기(和平崛起)’ 원칙이 보여주듯이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드러내놓고 패권을 추구하는,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다자간 협력에 입하는 중국의 자세는 주변 국가에 팽배해 있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계 강대국, 그리고 지역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이다(김재철, 2008; 박영준, 2006).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더 크다(김성한, 2008; 문정인 외, 2010; 이태환, 2008).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안보 분야에 관한 다자간 협력에 여전히 신중한 편이다.

한편, 현실주의 관점에서 지역통합이나 안보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아세안의 입장은 그리코(Grieco, 1993)의 ‘구속 명제(binding thesis)’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국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이등국가들은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자신에게 효율적인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규칙을 만들고 동시에 힘센 국가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다.⁷

2. 지역 안보공동체론

이처럼 (신)현실주의의 패권주의 관점이나 세력균형론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와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각국의 대응을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신)현실주의의 관점은 이를 넘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이나 다자주의적 제도의 구축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지난 10여 년간의 역내 지역주의 실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안보공동체 구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우리는 이를 ‘지역 안보공동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론적 관점으로는 주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등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자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지역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위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이러한 안보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논의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공동체 논의의 다수는 지역의 범위를 동북아에 한정시키고 있다(정희석 외, 2008).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과 안보공동체 또는 평화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0년대 중엽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조명현, 1994; 최영관, 1994; 이상균, 1997; 김유남 외, 1999; 박건영, 2000; 김유은, 2004; 구갑우 외, 2005; 김재한, 2005; 김성철, 2006; 김영자, 2006; 남궁곤, 2006; 이신화, 2006; 정경영, 2006 등 다수). 이들은 동북아에서 안보공동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심으로 평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김성철, 2006; 조명현, 1994; 최영관, 1994), 안보레짐의 구축을 제안하기도 한다(김유남 외, 1999; 정경영, 2006 등).

⁷ 그리코의 ‘구속명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영중(2001) 참조.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역 안보공동체의 외연을 넓혀, 동북아에서 동남아(아세안)까지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과 안보공동체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유은, 2005; 송병록, 2002; 신윤환, 2008; 엄상윤, 2010; 이남주, 2005a; 이상현, 2008; 조윤영, 2006; 최강, 2005; 최영중, 2003; 2004; 2005; 한용섭 외, 2005; 2010 등). 이들 역시 동북아 안보공동체론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개선하는 당위적인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비록 협의의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논의하더라도(즉, 초점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두더라도) 그 경계를 폐쇄적이고 닫힌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남아 등 여타 지역을 포함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논의들도 적지 않다(김성철, 2006; 김영작, 2006; 남궁곤, 2006 등).

그러나 현실주의 이외의 이론적 관점에서 지역 안보공동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대부분 동(북)아시아의 안보공동체 구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즉,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다자간 안보협력 차원은 몰라도, 상당히 제도화된 수준의 (EU에 버금가는 형태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의 이론적 관점은 주로 하스(Haas, 1958; 1961; 1964; 1969) 등이 제기한 신기능주의의 관점이나 코헤인(Keohane, 1983; 1984; 1989; 1993) 등에 의해 발전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관점이 주를 이루나, 최근에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⁸ 이 중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논의한 한용섭 등의 최근 연구(한용섭 외, 2010)는 지역통합의 단초를 경제영역과 같은 저위(低位)정치(low politics)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통합은 경제통합의 필연적 부수효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협력 및 환경, 재난,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⁸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의 대표적 예로는 한용섭 외(2010)가 있고, 제도주의 관점에서 안보공동체를 논의한 예로는 김유남 외(1999); 정경영(2006)(이상 동북아 안보공동체론), 조윤영(2006); 최영중(2005)(이상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등이 있으며, 구성주의에 입각한 논의의 예로는 김유은(2004)이 있다.

(nontraditional security)’ 부문에서 협력을 진행하다 보면 민감한 정치문제들에 대한 협력도 수반되어 진정한 안보·평화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유은(2005)은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구축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제도주의 입장에 있는 조윤영(2006) 같은 이는 지역 안보공동체 구축의 방법론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협력형 안보레짐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다양한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론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논의들이 거의 대부분 지역 안보공동체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위론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이들이 제시하는 실천 방법론과 전략이 그리 구체적이거나 현실적합성 있는 대안이라기보다 다분히 추론에 근거한(유럽과의 비교에 입각한, 또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해낸)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이 ‘저위정치’를 강조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안보공동체 문제를 여타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지역화 추세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복합적 접근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들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에서 상당수의 연구자들(김유은, 2005; 송병록, 2002; 이신화, 2006; 조윤영, 2006; 최강, 2005; 한용섭 외, 2010 등)이 지역 안보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비전통적 안보’ 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들은 과거에 정치적·군사적 안보 문제에 가려 그리 중시되지 않았던 비전통적 안보의 문제, 예컨대 초국가적 테러, 마약·무기 등의 밀매, 국제범죄, 해상보안, 에너지, 환경문제, 자연재해와 재난의 문제, 광역전염병 등 보건문제, 난민, 불법 이민 등 다양한 영역의 안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리고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부문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습’하는 과정이 선행되면 지역 안보공동체 구축의 개연성도 높아진다고 본다.

비전통적 안보의 문제는 우리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지역에서 상정할 경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안보위협보다는 내부의 안보위협(즉, 민족·종교적 갈등이나 분리주의운동, 반군, 테러 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어젠다에서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또는 인간안보의 문제가 차지할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V.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다음으로 다룰 것은 필자가 ‘동아시아 아이덴티티(identity) 담론’이라 명명한 것인데, 이는 앞에서 다룬 경제적·정치안보적 담론보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더 관련이 있다. 또한 주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과 사회학 등 일부 사회과학에 그 학문적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 담론의 주된 발신자들이다. 이 담론의 등장에는 1970~80년대 신흥공업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은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정체성에 관한 담론이다. 즉, 동아시아에는 서구 문명과 구별되는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고, 이것을 역내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문화적 공통성 또는 유사성에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은 크게 ‘문화동질성’ 담론,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⁹ ‘문화동질성 담론’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 민족, 그 구성원들이 모두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지역의 정체성(아이덴티티) 형성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은 동아시아가 서구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은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외(外)적인 속성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의 개별 논의나 저작들에서는 이 두 담론

⁹ 아이덴티티(identity)란 영어 단어에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다(박승우, 2008a: 29).

의 요소가 혼재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둘은 그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전자는 보다 ‘문화론’적인 담론인 데 비해, 후자는 여러 가지 문화 외적 요인, 예컨대 사회구조적 또는 제도적 요인들까지도 고려하는 담론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

한편,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은 이 둘과는 보다 다른 논의를 제시한다. 이는 ‘동아시아 정체성(East Asian identity)’이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이들은 ‘지역 정체성’이란 것이 다른 모든 집단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나종석 외, 2009; 박사명, 2006; 박승우, 2008a; 2008b; 백영서, 2000).¹⁰ 이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동질성이나 동아시아만의 특수성 및 정체성을, 당연히 전제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는 ‘지적 실험’(백영서, 2000)과 ‘일상적 실천’(박승우, 2008a)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본 논문에서 새로운 담론 유형으로 제시할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동아시아 정체성 만들기’에 대해서는 제VII절에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의 나머지 논의는 ‘문화동질성 담론’과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 이 두 가지에만 국한시키기로 한다.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이라고 부를 만한 논의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일본과 중국 등에서 등장했으나,¹¹ 전후(戰後) 이런 류의 담론이 다시 제기된 것은 1980년대에 소위 ‘동아시아 발전론’ 및 ‘유교문화권’ 논의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¹² 1960~80년대에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¹⁰ 정치학자들 중에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입장에 있는 이들이 지역 정체성의 형성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박사명(2006)이 그 대표적인 예다.

¹¹ 근대의 동아시아 담론(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나타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승우(2008a)를 볼 것.

¹² 전전(戰前)의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이 서구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대응하는 저항 담론, 또는 수세적·방어적 담론으로 등장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우월감과 아울러 서구를 겨루어볼 만한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일종의 공세적 담론의 성격이 짙다 하겠다(박승우, 2008a: 31).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그 경제적 성공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논의를 ‘동아시아 (경제)발전론’이라 부르는데, 이 담론의 등장에는 허만 칸(Kahn, 1979)이나 피터 버거(Berger, 1983; 1988) 같은 서구 학자들의 공헌이 컸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발전이 유교 윤리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유교 윤리에는 권위에 대한 존중, 교육의 중시, 근면·절제 등 근로윤리, 검약의 정신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 윤리를 공유하는 일본과 4대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에 중국까지 묶어 ‘유교문화권’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다(김홍경, 1999).

이들의 논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교자본주의론’으로 확대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유교자본주의론이라 부를 만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김홍경, 1999). 우리나라에서 유교자본주의는 초기에 주로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다가 1990년대 말부터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논객들로는 국민호(1997), 유석춘(1997a; 1997b; 1998), 함재봉(1997; 1998; 1999)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교자본주의’와 더불어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라는 개념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 개념의 보급에는 특히 싱가포르의 리관유(Lee Kuan Yew, 李光耀)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같은 정치인들의 역할도 한몫 했는데, 이 개념 또한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요소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유사성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 등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강정인, 2002; 김성진, 1999; 전제국, 1999a).¹³

이상은 모두 동아시아의 공통된 동질성(아이덴티티)과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논의들 중에는 전술한 ‘문화동질성 담론’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칸이나 버거의 논의,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

¹³ 전제국(1999a: 196)은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시아 사회는 가족중심주의와 충효사상,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공동체주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사회질서·기강의 중시, 경쟁·대결보다 합의·조화의 존중 등 문화전통과 가치규범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론자들의 일부 저작(김일곤, 1999; 유석춘, 1997a; 1998; 유석춘 외, 2005; 함재봉, 1997)은 문화동질성 담론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정확히는 동북아 3국과 싱가포르, 경우에 따라 베트남까지) 각국이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등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이들의 경제발전에 가장 핵심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 외에도 이어령(1994; 1995), 김용운(1994; 1995), 손병해(2007; 2010) 등의 논의에서도 ‘문화동질성 담론’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이어령 같은 이는 그의 낭만적 상상력을 과도하게 발휘하여 다양한 나라와 인종, 민족,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간주하고, 이 아시아 문명을 서구 문명과 대립시키고 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이어령, 1995) 또는 심지어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이어령, 1994)을 주저 없이 이야기한다. 물론 그가 말하는 아시아 또는 동양(비서구)에는 기실 아시아는 없고 한·중·일 3국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의외로 인문학자가 아닌 김용운(수학), 손병해(경제학) 같은 이도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김용운은 ‘민족원형론’이란 것을 내세운다. 그는 모든 민족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인 ‘민족 원형(原型)’, 즉 어떤 원초적인 문화요소가 있다면서, 한·중·일 3국은 공통의 민족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한·중·일에 인도를 보탠 소위 ‘동양 문명권’을 상정하고, 이 동양 문명권은 서양 문명과 구별되는 정신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핵심적 요소가 바로 (서구 문화의 비관용성에 맞서는) 관용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동질성 담론은 동아시아 각국이 어떤 동질적인 가치체계나 문화를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정체성(아이덴티티)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우리가 아직 이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동질성 담론’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후자에서는 문화적 요인만으로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모두 설명하려는 문화결정론적 요소가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유교 자본주의 논객에게서 이 두 담론의 요소를 모두 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유석춘

의 경우 어떤 저작(1997a; 1998)에서는 유교문화와 자본주의의 친화성, 그리고 유교문화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역설하다가, 또 다른 저작(1997b)에서는 이러한 문화론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자에서 그는 “한·중·일 3국에서 발생한 경제의 역동성은 각각의 국가가 모두 자본주의라는 경제의 작동방식을 나름대로의 유교적 사회관계와 조화시키면서 제도적 동형화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유석춘, 1997b: 136)고 주장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문화론이 아니라 제도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에는 ‘유교자본주의’ 또는 ‘동아시아적 자본주의’ 논의 외에 ‘동아시아 민주주의’ 논의도 포함된다(강정인, 2002; 김영명, 1999; 이승환, 1999a; 전제국, 1999b; 함재봉, 1997). 이들은 동아시아 문화, 특히 유교 문화가 민주주의와 병존 가능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서구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동아시아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 중 김영명은 동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징이 “문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전통과 문화의 소산”이 아니며,¹⁴ 첫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처했던 지정학과 이데올로기적 대치, 둘째는 가부장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가부장주의 또한 (문화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발전단계에 관한 것”이라면서, 문화론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김영명, 1999: 65-66). 이처럼 이들 ‘동아시아 특수성’ 논자들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설명함에 있어 문화결정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한다.

동아시아에 특수한 정치경제체제의 모습을 ‘유교자본주의’나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이들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은 아래에서 논의할 ‘대안체제 담론’과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즉, 서구근대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견줄 만한, 또는 대항할 만한 또 다른 모델을 동아시아의 특수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은 적극적으로 서구근대의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체제 담론’과는 달리, 서구근

¹⁴ 그는 “전통과 문화가 동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차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김영명, 1999: 65).

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으로 새로이 부상한) ‘동아시아’를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대등한 존재로 격상시키려 할 뿐이다. 유교 자본주의라는 개념 또한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문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하위 범주의 하나로 유교자본주의 개념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발전의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해명하려 했을 뿐이다.

이들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겠다. 먼저 ‘문화동질성 담론’의 경우 문화에 대한 물이해를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이 담론이 갖고 있는 문화결정론, 문화본질론(cultural essentialism), 문화적 원초주의(primordialism)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을 했으니(김광익, 1997; 1998; 김은실, 2000; 박승우, 2008a; 2008b; 백영서, 1997; 이수훈, 1998; 이승환, 1999a; 1999b; 한경구, 1996; 2000) 여기서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으나,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사회의 문화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고정적이고 전일적(monolithic)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늘 변화하면서 서로 갈등·경합하는 역동적인 것이며, 내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문화요소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다문화(multicultural)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는 다 ‘다문화적’이다). 더구나 이처럼 변동성도 높고 내적으로도 이질적인 여러 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를 단일의 기준하에 하나의 동일한 문화권으로 엮는 작업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도 맞지 않다. 단일의 ‘동아시아 문화’가 가능하고 하나의 ‘동아시아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주장은 역사적·사회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논리적 구성물(mental construct)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⁵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문화동질성 담론과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에 공히 들어 있는 ‘동북아 중심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더 정확히는 한·중·일 3국을 비(非)서구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는 그 문화적 전형으로 보

¹⁵ 동양문화, 아시아문화, 유교문화, 한자문화, 아시아적 가치 등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을 내세우는 개념들은 모두 서구 문화(또는 ‘서구 문화’라고 작위적으로 규정된 일종의 허상)의 잔여 범주로서 또는 역상(inverse image)으로 구상되든지, 아니면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 유사성과 친화성을 가진 요소들만 전부 끌어모아 하나로 묶어낸 추상적 구조물이다(박승우, 2008b: 329).

는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시아(동양)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만 해도 동북아 외에 동남아 11개 나라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동북아의 3개국이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중·일 3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 나라는 유교문화나 한자문화권 등의 개념으로 그 동질성을 논하기 곤란할 정도로, 사실상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로 이질적인 점이 많다(고병익, 1996; 김광익, 1998). 또한 이 세 나라의 유교문화란 것도 어떤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고 ‘토착화’되어 있다. 더구나 동남아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동남아는 동북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일종의 다문화의 경연장 같은 곳이다.

세 번째로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오리엔탈리즘’ 또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인데, 이는 문화동질성 담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에도 내재해 있다. 이들 담론에 전반적으로 잠복해 있는 (역)오리엔탈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이들이 지적해왔으며(김광익, 1998; 김은실, 2000; 나종석 외, 2009; 박상수, 2010; 이옥연, 2000; 정재서, 1994; 한경구, 2000), 필자 또한 이전의 논문에서 ‘역 오리엔탈리즘(reversed orientalism)’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재규정하여 이들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에 들어 있는 기본 관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박승우, 2008a).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안체제 담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유교자본주의론이나 동아시아 발전론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에는 서구 근대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서구의 정치경제체제를 전제하고 그 틀 위에서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술한 경제공동체 담론이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 또한 이어지는 대안체제 담론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이다.

VI. 대안체제 담론

네 번째로 다룰 동아시아 담론의 유형은 필자가 ‘대안체제 담론’이라 명명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대안적 사회체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유형의 담론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효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백낙청, 최원식, 백영서 등 주로 ‘창작과 비평’ 계열 인문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진보적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인데, 이들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붕괴로 기존의 진보 진영의 담론의 현실적 준거기준이 갑자기 사라진 공황적 상황에서 새로운 담론의 근거지로 동아시아를 바라본다.

대안체제 담론의 최초의 발신자는 아무래도 최원식이라 하겠는데, 그의 1993년 논문(최원식, 1993)이 ‘동아시아’를 우리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사유를 위한 화두로 제기했던 첫 계기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자신의 동아시아 담론을 “서구적 근대의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종래의 일국주의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형성의 원리로서 동아시아적 시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또는 “서구와 동구, 동아시아식 사회주의와 동아시아식 자본주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대안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최원식, 1993: 219, 225; 1995: 14-15).

백낙청 또한 이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비록 본격적인 동아시아 담론의 주창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의 ‘근대극복론’과 ‘대안문명론’은 이 네 번째 유형의 동아시아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문명(또는 그의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자면, 동아시아의 ‘문명적 유산’)을 동원하여 ‘자본주의 문명’을 대신할 ‘대안문명’ 또는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건설할 필요성이 긴박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국가 단위(분단체제론)에서 지역 단위로(동아시아 문명권 내 민중연대), 더 나아가 세계 차원(새로운 전지구적 문명 건설)에서 ‘근대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백낙청, 1995; 1996). 최근의 글(백낙청, 2004)에서도 그는 동아시아에서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을 주장한다.

그러나 백낙청의 동아시아 담론은 사실상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 및 그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은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말로 민족모순, 진영모순, 그리고 세계체제의 모순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트남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민족모순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냉전체제하에서 극복되었고, 독일의 분단은 진영모순과 냉전체제의 산물로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극복이 되었지만,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이 세 모순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어 냉전구도의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길이라 한다(백낙청, 1992; 1998).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운동에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는 연결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매개항으로서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편린이 엿보인다.

최원식의 동아시아 담론은 이러한 백낙청의 지적 작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최원식은 자신의 동아시아론의 핵심적 문제의식이 “한반도 통일운동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면서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는 분단체제를 푸는 작업”이야말로 자신의 동아시아 담론과 “간절히 맞물린 사업”이라고 한다(최원식, 1993). 그는 한반도를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지적 소통을 달성하는 ‘고리’ 또는 ‘동아시아의 균형추’(최원식, 2000)로 비유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걸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동아시아론의 알파요 오메가”(최원식, 2004: 15)라 주장한다.

이들 소위 ‘창비그룹’의 동아시아 담론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자본주의의 전면적 승리로 해석하지 않고” 새로운 진보 담론의 계기를 “동아시아적인 것의 특수성”에서 찾으려 하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인 것의 특수성을 자본주의 너머의 것으로 파악”(전형준, 1997: 28)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체제’를 발견하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백영서의 동아시아 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동아시아 담론과 실천을 통해 “전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하는 커다란 과제를 실현할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동아시아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혁에 개입하려는 지향을 내포한다”고 했다(백영서 2000: 64, 66).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약간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복합국가론’이 그것이다. 그는 ‘단일의 국민국가’라는 거버넌스 형태를 뛰어넘어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동적인 국가결합의 형태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복합국가의 실험이 중국의 대만 문제나 한국의 통일,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구성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백영서, 2000).

백영서가 제기하는 동아시아 논의 속에는 아래에서 다룰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적지 않다. 먼저 그가 주창하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구상을 보자. 그는 자신이 말하는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란 “동아시아를 어떠한 고정된 실체로도 간주하지 않고 항상 자기 성찰 속에서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백영서, 2000: 50). 비록 이 언술 속에 담긴 그의 모든 의도를 다 수궁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동아시아란 지역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하는 것’이자 하나의 ‘실천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는 공감의 간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가 “‘순수한’ 단일문명(이나 문화)을 공유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동아시아권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대국’ 사이에 끼여 종종 소홀히 다뤄지는 ‘주변’적 주체들, 즉 (각 국민국가 안의 소수민족을 당연히 포함한) 여러 민족과 지역들의 역할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면서 ‘주변으로부터 보는 동아시아’를 이야기한다(백영서, 2000: 64; 2004). 동아시아를 ‘단일문명의 덩어리’가 아니라고 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이 가지만, 그보다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그것도 주변의 여러 ‘약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소수자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동아시아란 것이 이들 다양한 주체가 서로 부대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보는 점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들 대안체제 담론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니,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대안체제 담론’에 ‘대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안체제로

서의 동아시아' 담론은 기본적으로 거대담론(grand theorizing)에 속한다. 대개의 거대담론이 다 그러하듯이 이 담론 또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이론화 작업이 부족하다. '서구 근대를 넘어서는 대안적 체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체제' 등의 언명들은 규범적이고 선언적일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대안체제'를 지향한다면서도 '대안'은 실종된 셈이다.

이 담론의 논자들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대안체제(그것이 어떤 것이든)를 현실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어젠다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기대만큼의 과감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복합적 정치공동체' 개념(박명규, 2000)이나 '복합국가론'(백영서, 2000)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래에서 다룰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구상에도 이런 개념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주창하는 최태욱 등의 논의도 대안체제의 밑그림에 약간의 색을 입히려는 좋은 시도로 읽힌다(최태욱, 2009).

두 번째 문제점으로 대안체제 담론에 잠복해 있는 '한반도 중심주의'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체제의 극복이나 평화체제의 구축, 또는 통일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절대적 명제이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반드시 이것과 연계되어야 하고, 또 심지어 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발상에는 공감하기 힘들다.¹⁶ 이와 관련하여 임우경(2007: 20)이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구체적 현실과 그 상호연동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 없이 한반도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론을 고집하는 것은 심지어 또 하나의 패권주의적 의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나친 우려는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안체제 담론이 갖고 있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이다.¹⁷ '역 오리엔탈리즘(reversed orientalism)'은 서구와 동양(동아시아)을 이항대립(二項對立)적으로 분리하고, 전자(前者)를 (모방과 추종이 아닌) 경쟁과 극

¹⁶ 대안체제 담론의 '한반도 중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은 류준필(2009); 임우경(2007); 장인성(200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¹⁷ 이하 논의의 상당 부분은 박승우(2008a)에서 가져왔다.

복의 대상으로 간주한다.¹⁸ 역 오리엔탈리즘의 인식론적 구도는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의 틀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필자가 말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역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과 마찬가지로) 항상 ‘서구 대 동양(동아시아)’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로 세상을 바라본다. ② 동아시아(동양)를 서구의 잔여(residual) 범주로 파악한다. ③ 동아시아 밖의 모든 국가와 민족(특히 서구)을 타자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경쟁(대항)하고 이겨야(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④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나 우월감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내면 깊숙이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일종의 강박관념이 잠재화(潛在化)되어 있다.

이러한 역 오리엔탈리즘의 요소가 ‘대안체제’ 담론에도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 담론의 주창자들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 이들에게서 지역주의는 EU 등이 보여주는 국가 간 체제 또는 열국(列國)체제(interstate system)의 재구성 문제가 아니라 주로 지식인들의 연대, 시민사회의 연대 등을 의미하지만 — 는 ‘서구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적 담론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체제가 반드시 ‘근대 서구’ 이외의 체제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가 왜 반드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외의 제3의 대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이러한 비판은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대안체제 담론이 그리는 ‘대안적 체제’라는 것이 과연 (서구를 배제하고) 동양(동아시아)이 독자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체제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다. 예컨대, 근대 서구의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자본주의체제가 자연을 인간의

¹⁸ 아리프 딜릭(Dirlik, 1996; 1997)은 ‘자아 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과 ‘역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in reverse)’, 이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는 서구가 만든 ‘서구-선진, 동양-후진’의 이항대립 구도를 아무런 의문이나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역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를 이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딜릭이 말하는 ‘자아 오리엔탈리즘’에는 “서구를 강자(强者)로, 동아시아 자신을 약자(弱者)로 설정하는 일종의 열등감과 패배 의식이 전제”되어 있지만, 필자가 말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에는 “서구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호승 지심(好勝之心)이 전제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동아시아가 경제적 성공을 거둔 뒤인 최근에 등장한 것[인데] …… 동아시아(경제적 성공으로 새로이 부상한)를 서구와 거의 대등한 존재로 격상시킨다”(박승우, 2008a: 37-38).

일방적인 식민지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환경을 보전해 가며 인간 공동체의 삶을 확보해 가자는 생태주의적 발전체제란 것도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이 단독으로 추구한다고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와 주민이 전 지구적으로 협력할 때만 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더구나 이런 대안적 체제가 과연 자본주의와는 다른, 자본주의와는 병존 불가능한, 별개의 체제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II.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지금까지 논의한 ‘동아시아 담론’의 네 가지 유형과 그 하위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전 논문에 없던 한 가지 유형의 동아시아 담

표 2 동아시아 담론의 유형

| | | |
|---------------|--|---------------------------|
| 경제공동체 담론 | 동북아 경제공동체론 | |
|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 |
|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 현실주의적 동아시아론 | 패권이론 세력균형론 |
| | 지역 안보공동체 담론 | 동북아 안보공동체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
|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 문화동질성 담론 동아시아 특수성 담론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 | |
| 대안체제 담론 | | |
|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론*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 대안체제 담론*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

주: *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기존에 제기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동아시아 정체성’, ‘대안체제’ 담론의 일부를 포괄한다.

** 또한 기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의들도 포함한다.

론을 더 추가할 것이다. 필자는 이 절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관점을 공유하는 담론을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으로 명명할까 한다. 이는 필자의 그간의 개인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담론이기도 한데, 앞의 네 가지 담론 유형으로 분류된 논자들 중 상당수는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또는 그 일부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화의 틀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가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¹⁹

1. 무엇이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의 공간적 외연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으로 호명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동아시아의 경계 문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성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1990년대 초 동아시아 담론의 태동 단계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했던 인문학자들에게 동아시아는 동북아,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만을 생각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었다. 동양문명론, 유교·한자문화권 논의, 유교자본주의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안체제 담론의 대부분도 그 지역의 구상 범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안보적 담론에서도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논의가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를 이야기하고, 동아시아란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상상하며, ‘동아시아 담론’이란 것을 운위하게 된 것은, 우리 연구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사변적·추상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사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²⁰ 그리고

¹⁹ 여기서 ‘동아시아공동체’라고 ‘동아시아’와 ‘공동체’를 붙여 쓴 이유는 이 담론의 명칭을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쓰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동아시아’나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특정의 담론만을 지칭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용어 선택이다.

²⁰ 동아시아를 둘러싼, 그리고 동아시아를 부르는 많은 명칭들(‘아시아’, ‘동양’, ‘오리엔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극동’ 등)이 대개 ‘서구’ 개념의 잔여 범주로 제출되거나, 서구의 지식인·정치가·군인·식민주의자 등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전략적이든, 학문적이든,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부여했거나, 어쨌든 외적으로 부과한 비(非)주체적 호명이었다. 탈냉전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동아

그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아시아는 동북아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이 지역의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첫째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냉전체제의 해체,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등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축의 하나이던 ‘서태평양’이란 지역 개념보다는,²¹ ‘동아시아’란 지역 개념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에서 동남아로, 동심원적 하향 침투의 과정을 보인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의 확산,²²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의존의 확대 등이 동남아와 동북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²³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미시적 생활세계에서도 ‘동아시아’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인적 교류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매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광, 비즈니스, 유학, 연수, 이주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데, 동아시아 역내 이동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연간 출국자의 90% 정도가 동아시아 지역(중국, 일본, 동남아)으로 나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동아시아

시아’는 자신이 스스로 그 이름을 쓰고 있다.

²¹ 이에에는 일본과 남한, 대만, 그리고 아세안의 초창기 회원국 5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포함된다. 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 국가의 아세안 가입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의 일이다. 베트남은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했고, 그 이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합류했다.

²² 일본에서 발원하여 선발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으로, 다시 동남아의 선발 개도국(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원심적 확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안향(雁行, flying geese)형 발전모델이니, 생산주기(product cycle) 이론이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²³ 우리나라의 2010년도 대외 총 교역량은 약 8,916억 US달러(수출 4,664억 달러, 수입 4,252억 달러)이다. 이 중에서 중국·일본·아세안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2.4%에 달한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약 1,884억 달러(전체의 21.1%)로 가장 많고, 아세안과의 교역량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데, 약 973억 달러로 전체의 10.9%를 차지한다. 일본이 그 다음으로, EU보다 조금 더 많은 924.7억 달러 규모이다. 이 자료를 제공해 준 박번순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²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러한 인적 교류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삶의 공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²⁵ 이처럼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아시아의 역내 교류와 상호의존, 그리고 점진적인 공동체의 형성은 결코 동북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이제 담론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자,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지역화’는 말할 것도 없고, 위로부터의 ‘지역주의’ 또한 기본적으로 동북아가 아니라 광역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주의는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 East Asia Economic Group) 제안에서부터 시작하여 1994년 한·중·일 3국의 ARF 참여,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의 개최, 그리고 2001년과 그 이듬해에 각각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및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보고서, 2005년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등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박사명, 2008; 신윤환 2008; 2009). 실제로 한·중·일 3국 간에는 이렇다 할 지역협력체 구성의 논의가 없는 데 비해 아세안+3 프레임워크하에 이루어지는 지역주의 논의는 이를 압도할 정도로 활발하다. 이처럼 대체로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지역주의 흐름도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지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창출할 만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상상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에게는 애초에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들

²⁴ 2011년 1~3월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 180만 명 중 82%가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2011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등록 외국인 94만 4천 명 중 85%가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²⁵ 필자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동아시아 공동체는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프로젝트가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상의 요구’가 추동하는 것이요, 동아시아 공동체는 우리네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개개인의 실천의 궤적들로 구성되는 것이다”(박승우, 2008b: 339)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명규(2000), 박사명(2008), 백영서(2000) 등에서도 같은 논지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은 ‘중국 대 세계(중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라는 관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중국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여러 지역 중 하나,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변방’의 하나일 뿐이다(백영서, 2000; 쏜겨, 2009; 장인성, 2005). 중국의 몇몇 논객들이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동아시아’란 것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국 정부다. 과거에 동아시아의 다자적 지역협력에 부정적이던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동아시아’도 동남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이지, 결코 한국이 생각하는 ‘동북아’는 아닌 것이다(김재철, 2008; 이종석, 2011).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이 우리가 제기하는 ‘동북아 공동체론’에 호응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대체적인 아시아 인식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 있지, 동북아에 머물러 있어 있지는 않다(손열, 2006; 이종석, 2011; 장인성, 2005). 이런 이유로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상정하고, 한·중·일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묶는다는 구상은 학문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내적 용도로 쓰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외적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소위 ‘동북아공동체’는 외부인들에게 한국 지식인들의 일방적 구애로 비칠지 모를 일이다.

위에서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의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를 제안하는 논의들은 대체로 새로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유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외연을 유연하게 상정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는 논의들(김영작, 2006 등) 또한 이 담론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안체제 담론’의 대부분의 논의는 ‘동북아중심주의’, 또는 ‘한반도중심주의’의 인식구도에 매몰되어 있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백영서, 최태욱 등 일부 논자들은 광역의 동아시아에 공감하고 있다. 예컨대, 백영서의 경우 초기 저작에서는 ‘광역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다가 최근 저작(2004)부터는 동아시아 개념을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어떤 동아시아인가?

다음으로 던져볼 질문은 우리가 지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떤 성격의 지역 공동체여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평등과 호혜, 개방과 포용, 관용과 다양성’ 등 민주적 원칙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1) 평등과 공존공영 지향: 내부의 억압성 거부

먼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내적 구조’를 억압과 수탈, 차별과 배제가 지배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국가들 간의 배타적인 경쟁의 장(場), ‘민족주의적’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탈(脫)민족주의적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시험해야 할 무대여야 한다. 약소국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호혜의 원칙이 자리 잡아 공동체의 운용으로부터 가능한 한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단기적 국익(國益)을 추수하는 공간으로 보려는 동아시아 담론 일부의 경향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든가, 저개발 약소국에 대한 개발원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가 하는 최근의 논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여겨진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중국이나 일본 등 강대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 한 국가 간에 중심이나 패권이 따로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만약 현실적으로 국가 간 위계구조의 존재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가능한 한 억압성을 덜 발휘하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틀을 짜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소수민족이나 외국인 거주자, 여타 문화적 소수자 집단 등에 대해서도 배제와 차별이 없는 지역체제를 지향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개방과 포용 지향: 외부로 열린 지역 공동체

둘째,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는 공동체 내 구성요소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서도, 그리고 역외(域外) 국가들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EU식의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지역주의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최대한 억압구조를 지양해야 하겠지만, 외부에 대해서도 지배와 예속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한반도 중심주의나 동북아 중심주의도 거부하지만, 이처럼 ‘동아시아 중심주의’도 거부한다. 물론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과 같이 세계체제에서의 ‘동아시아 헤게모니’를 모색한다든가 하는 구상 또한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개방(openness)과 포용성(inclusiveness)을 전제로 하는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지향한다.

동아시아에서 건설될 지역 경제공동체가 다른 지역의 빈곤과 소외, 특히 여타 저개발 지역의 희생 위에 이 지역의 경제적 풍요를 구가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일본과 새로이 떠오르는 아세안 경제까지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어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할 경우, 그것은 지구 전체의 환경이나 생태계의 보전, 자원과 에너지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 배타적·폐쇄적이면서 또 하나의 ‘중심주의’ 원칙을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가 건설된다면,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 지역대국의 패권주의적 의도에 복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아마도 이런 문제의식에는 특히 대안체제 담론에 속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또한 반(反)서구주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패권주의 담론이나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특히 대안체제 담론에서 언뜻언뜻 드러나는 반서구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는 지양해야 할 함정 중 하나이다. 우리는 대안체제 담론에 나타나는 역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한다. 그리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반서구주의적 강박관념도 경계한다. 우리가 모색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서구 문명의 쇠퇴와 동아시아 문명의 부상 등의 역사주의(historicism)적 명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반드시 서구

근대의 대안 체제를 목표로 한다’는 등의 목적론(teleology)도 전제하지 않는다.

3) 다양성과 관용: 다문화 사회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셋째로 동아시아공동체는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는 문화 다양성의 상황을 존중하는 정신과 타자와 타 문화에 대한 관용을 요한다. 또한 다문화적 상황이란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가 함께 뒤섞여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출해 내는 ‘문화융합’의 상황이다.²⁶ 아직도 배타적·폐쇄적인 혈통적 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개될 다문화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 이에 대한 개방과 관용의 정신,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체득할 필요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과정은 다문화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좋은 배움터가 될 것이다.

3.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 동아시아 만들기: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떤 특정의 상태(state)라기보다, 유동적이면서 계속 변형·발전되어 가는 일종의 과정(process)이다. 카첸스타인(Katzenstein, 1997: 7, 11)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향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될 하나의 ‘정치적 구성물’이다. 이 점에서 많은 동아시아 학자들이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다케우치 요시미, 1966),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덜릭,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정문길 외,

²⁶ 다문화 사회를 대개 ‘샐러드 볼(salad bowl)’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리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다. 샐러드는 단순한 ‘문화공존’의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진정한 다문화 상황을 비유하려면 차라리 음식 중에 ‘김치’나 ‘찌개’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2000),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백영서, 2000)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래에도 영원히 불가능한 어떤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가 있어 단기간에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듯이) 성취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지속(longue durée)’ 또는 ‘중기적 국면(conjoncture)’의 시간 틀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현실주의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또한 조셉 나이나 로버트 코헤인 등이 지적하듯이 지역통합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일종의 가치부가적(value-added) 층위들을 형성한다(Keohane and Nye, 1975; Nye, 1968).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실천 여하에 따라 언젠가는 창출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김유은, 2004; 박사명, 2006; 신윤환, 2009 등)이나 신기능주의적 관점(신윤환, 2009; 한용섭 외, 2010 등)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배울 바는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수준과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지역 공동체는 반드시 EU와 같은 경성적·제도적 완전 통합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지역 통합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어떠한 수준의 공동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간단한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도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이고, 그러한 포럼도 일종의 공동체인 것이다.

2) 동아시아 정체성

‘동아시아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화동질론자들이 말하듯이 원초적이고 영구적인 고정불변의 어떤 문화 요소가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체성’도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하나의 지향점이다. 정체성은 또한 개인마다 다르고, 변화 가능하며 유동적이다. 정체성은 외적으로 결정되는 것만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기도 한다.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갈등과 대립, 대화와 협상의 과정이기도 하다.²⁷

²⁷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서문(정문길 외, 2000: 8)에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형성은 다층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적어도 정체

개인의 정체성은 또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복수의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인’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그러한 복합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국민으로서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 작업은 일종의 ‘문화 공동체’ 형성의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백영서(2000: 51)가 말하는 “동아시아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주체적인 지적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경계는 열려 있다고 했다. 그 경계는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하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열려 있다는 것은 그 구성원의 성원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도 포함한다.²⁸ 동아시아 공동체, 그리고 동아시아인(人)의 경계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미국인도 ‘동아시아인’일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도 ‘동아시아인’일 수 있다. 세계가 점점 더 글로벌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도 더욱 유동적이고 복합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3) ‘동아시아 만들기’의 주체

이러한 ‘동아시아 만들기’에서 ‘국가’(Track 1)는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다. 그러나 그 주된 행위자에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작업에서는 비(非)국가 행위자들도 다 함께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비국가 행

성 형성에 관한 한 대안체제론자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해 보인다.

²⁸ 박명규(2000: 17)는 어떤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유연하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경계의 유연화란 ... 지리적 경계이지만 인종적 경계는 아닐 수 있으며, 정치적 경계이지만 종교적 경계는 아닐 수 있는 ‘경계의 다차원적 복합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과 문화적 정체성이 통용되는 공간을 부질없이 일치시키려 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 다원주의가 바로 이 ‘경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논리이다”.

위자에는 학자·전문가 집단(Track 2)도 포함되겠지만, 시민사회운동단체를 비롯하여 여타 민간영역의 다양한 집단과 조직(Track 3)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으며, 시민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명규(2000), 백영서(2000), 이희옥(2004) 등의 논의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지향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의 논자들 중 일부가 ‘국가’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추동에 의한 일상생활사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만들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다 ‘동아시아 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동아시아 만들기’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예컨대,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한글 교육과 방과 후 멘토링에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동아시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일반 관광객들도 이미 스스로의 삶 속에서 ‘동아시아 만들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만들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자, 삶 그 자체이다.

4) 지역 거버넌스의 학습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택할 만한 좋은 경로 중의 하나는 바로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자간 협력의 ‘학습’을 해보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역내 국가 간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와 형태의 인적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노동력의 이동, 국제결혼, 여행, 유학, 연수 등). 그리고 국제범죄와 테러, 인신매매, 난민, 해상보안,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황사, 연무 등), 기후변화, 각종 자연재해(지진, 지진해일, 태풍, 홍수, 가뭄), 광역 전염병(조류독감, 신종플루, 신종박테리아), 식량, 에너지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온갖 문제들이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가 그 주권 영역 내에서만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등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도 있지만, 전술한 사회문제 중 상당수는 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박사명, 2006: 427-439). 우리는 이러한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학계, 시민단체(Track 1~3)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하나씩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제적(先制的, preemptive)이고도 전향적(前向的, proactive)인 대응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건강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의 실험 무대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하나의 학습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VIII. 맺음말

본 논문은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담론을 크게 네 가지 유형(‘경제공동체 담론’, ‘정치안보적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 아이덴티티 담론’, ‘대안체제 담론’)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을 다시 몇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각 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이를 주창한 학자들 및 그들의 저작을 소개하고, 각 담론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각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의 유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네 가지 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교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자, 필자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공동체 형성에 대해 가져왔던 그간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를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라 호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나 이 새로운 담론의 몇 가지 기본적 관점만 제시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는 후속연구에서 다룰까 한다.

다만 여기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새로운 유형을 제안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 및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의존, 그리고 이에 기반

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 움직임은 하나의 총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경제와 정치·안보, 그리고 사회·문화가 각각 따로 놀지 않으며, 모든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 공동체 구축 작업 또한 경제 부문 따로, 정치안보 부문 따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의제 따로 다루어서 될 그런 성격의 과제가 아니며, 이 모든 영역에서 총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실의 세계와 실천의 영역은 이러한데 문제는 담론의 영역에 있다. 동아시아 담론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동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문학 등 각각의 특정 학문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동아시아 담론의 정향과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분과학문 간의 강고한 경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지역화/지역 공동체 문제와 같은 복합적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논의를 제약할 위험성이 크다.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란 새로운 유형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현상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이란 주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적 소 영지(領地)를 고수하려는 학문적 지역주의(parochialism)에서 벗어나 분과학문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융·복합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만 공유한다면 어떤 학문영역에서 제기된 논의라도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를 하나로 묶어 사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의 장이 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2. “세계화·정보화와 동아시아의 문화정체성: 서구중심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211-238.
- 고병익. 1996.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지성사.
- 구갑우·박건영·최영중. 200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21(2), 31-64.
- 국민호. 1997.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31, 29-60.
- 권율·오쿠다 사토루·왕윤중·정재완. 2005.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 원조정책의 신진화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광익. 1997. “동아시아 담론의 실체: 분석과 해석.” 『상상』 여름호, 29-40.
- _____. 1998.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21(1), 3-25.
- 김규륜. 1992.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기봉. 2001. “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6, 12-38.
- 김기석. 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김영작·김기석(2006), 262-290.
- 김성진. 1999. “아시아 경제위기와 ‘아시아적 가치’ 담론.” 『전통과현대』 10, 214-251.
- 김성철. 2006.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김영작·김기석(2006), 60-92.
- 김성한. 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미국.” 하영선(2008), 81-119.
- 김세원. 2003.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과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호, 5-32.
- 김영명. 1999.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동아시아비평』 2, 60-74.
- 김영작. 2006.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상.” 김영작·김기석(2006), 13-36.
- 김영작·김기석 편. 2006.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파주: 한울.
- 김용운. 1994. “한·중·일의 원형과 미래.” 『포럼 21』 10, 9-18.
- _____. 1995. “동양 문명의 기원과 특징.” 『포럼 21』 13, 14-28.
- 김유남·노병렬. 1999.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39(1), 137-172.
- 김유은. 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4), 69-91.

- _____. 2005.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관계 이론.” 이승철 외(2005), 221-252.
- 김은실. 2000.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정문길 외(2000), 255-275.
- 김일곤. 1999. “유교적 자본주의의 인간존중과 공생주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 28-60.
- 김재철. 2008.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133-160.
- 김재한. 2005. 『동북아공동체』. 서울: 집문당.
- 김홍경. 1999. “유교자본주의론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 10-17.
- 김홍종 · 손병해 편. 2005.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중석 · 권용혁 · 이진원. 2009.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181-375.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남궁곤. 2006.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천 유형과 관련 6개국 입장 평가.” 김영작 · 김기석(2006), 215-261.
-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66] 1997.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최원식 · 백영서(1997), 71-95.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편. 2008.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서울: 이매진.
- 딜릭, 아리프(Arif Dirlik). 2000.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2000), 80-112.
- 류준필. 2009.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52(4), 38-72.
- 문우식 · 윤덕룡 · 이영섭. 2000. “아시아 위기 및 유로화 출범에 대비한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경제분석』 6(2), 165-216.
- 문정인 · 서승원. 2010.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기회와 도전.” 문정인 · 오코노기 마사오 편,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공동체 구상』, 291-369. 서울: 아연출판부.
- 박건영. 2000.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16(2), 39-90.
- 박명규. 2000. “복합적 정치공동체와 변혁의 논리.” 『창작과비평』 28(1), 8-26.
- 박번순. 2010. 『하나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통합과 공존의 모색』.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_____. 2008. “동아시아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11-44.
- 박상수. 2010.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아세아연구』 53(1), 73-100.

- 박승우. 2008a.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54, 9-49.
- _____. 2008b. “동아시아 담론의 현황과 문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309-346.
- 박영준. 2006. “탈냉전기 일중 간 세력경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김영작 · 김기석 (2006), 95-135.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2010.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인원. 2001.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국제경제연구』 7(2), 31-55.
- 박제훈. 2004.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제안.”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81-119.
- 백낙청. 1992.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4), 288-309.
- _____. 1995. “민족문화론, 분단체제론, 근대극복론.” 『창작과비평』 23(3), 8-26.
- _____. 1996.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 『창작과비평』 24(2), 8-17.
- _____.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4. “21세기 한국과 한반도의 발전전략을 위해서.” 백낙청 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13-32. 파주: 창비.
- 백영서. 1997.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20세기 한·중·일의 인식.” 최원식 · 백영서 (1997), 11-26.
- _____.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2004), 13-36.
- _____. 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10-34. 파주: 창비.
- 손병해. 1992.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행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대륙별 시장통합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의의.” 『비교경제연구』 10(1), 129-162.
- _____. 2007. “유교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국제경제연구』 13(1), 1-24.
- _____. 2010. “유가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동북아 경제통합에의 시사점.” 『동북아경제연구』 22(1), 1-34.
- 손열. 2006. “지역, 지역주의, 동아시아.” 손열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11-33. 서울: 지식마당.
- 송병록. 200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군사, 안보부문.” 『국제정치논총』 42(3), 103-123.
- 신윤환. 2008.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2008), 373-

- 398.
- _____.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연구』 56, 107-37.
- 쑤커(孫歌). 2009. “동아시아적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52(1), 13-56.
- 안충영 · 이창재 편. 2003.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 엄상윤. 2010.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국제관계연구』 15(1), 45-76.
- 유석춘. 1997a.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현대』 1, 74-93.
- _____. 1997b. “동아시아 ‘유교 자본주의’ 재해석.” 『전통과현대』 3, 124-145.
- _____. 1998.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계간 사상』 36, 120-136.
- 유석춘 · 최우영 · 왕혜숙. 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한국사학회』 39(6), 52-86.
- 이기완. 2010.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제관계연구』 15(1), 77-103.
- 이남주. 2005a.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창작과비평』 33(1), 64-81.
- _____. 2005b.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개방 전략.” 『동향과 전망』 64, 45-72.
- 이상균. 1997.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가전략』 13(1), 177-211.
- 이상현. 2008.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하영선(2008), 249-281.
- 이수훈. 1998.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유교.” 『동아시아비평』 1, 80-93.
- 이승철 외. 2005.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승환. 1999a. “반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유교적 자본주의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 61-82.
- _____. 1999b.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313-336. 고양: 전통과 현대.
- 이신화. 2006.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36, 7-40.
- 이어령. 1994. “탈근대문명과 동북아시아의 선택.” 『포럼 21』 9, 158-162.
- _____. 1995. “아시아문명의 카오스 도형: 한 · 중 · 일 세 별의 궤도.” 『포럼 21』 14, 26-36.
- 이옥연. 2000. “동아시아론의 지형학.” 『철학과현실』 45, 180-194.
- 이종석. 2011.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세종연구소.
- 이창재. 200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추진방안: 동아시아 FTA를 중심으로.” 이승철 외(2005), 121-147.
- 이창재 · 강승필 · 김동주 · 김시곤 · 김익수 · 백권호 · 이수성 · 한택환. 1994. 『21세기 동

- 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 김성철 · 백훈 · 한택환 · 이재영 · 방호경.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 김한성 · 방호경 · 노유연. 2009.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충열 · 박철한. 2008.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277-307.
- 이태환. 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중국.” 하영선(2008), 121-163.
- 이희옥. 2004.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2004), 341-365.
- 임성학. 200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전략.” 『동아연구』 49, 5-34.
- 임우경. 2007.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 40, 1-51.
- 장인성. 2005.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세계정치』 26(2), 3-26.
- 전재성. 2008. “EU와 동아시아 공동체.” 하영선(2008), 43-79.
- 전제국. 1999a.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15(1), 187-219.
- _____. 1999b.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재평가.” 『동아시아비평』 2, 43-59.
- 전형준. 1997. “같은 것과 다른 것.” 최원식 · 백영서(1997), 278-297.
- 정경영. 2006. “동북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전략연구』 36, 41-70.
- 정문길 · 최원식 · 백영서 · 전형준 편. 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0.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2009. 『동아시아 경제통합』,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정재서. 1994. “동양적인 것의 슬픔.” 『상상』 여름호, 144-158.
- 정희석 · 박형. 2005.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35, 19-41.
- 조명현. 1994.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과 대응.” 『전략논총』 3, 8-82.
- 조운영. 2006. “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317-344.
- 조종화 · 김우진. 2001.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강. 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와 다른 안보협력체 간의 관계.” 이승철 외(2005), 253-291.

- 최영관. 1994. “동북아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3, 156-191.
- 최영중. 2001. “현실주의 지역통합이론.” 『한국정치학회보』 35(2), 409-425.
- _____. 2003.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 아연출판부.
- _____. 2004.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상 및 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237-270.
- _____. 2005.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이승철 외(2005), 19-65.
- 최원식. 1993. “탈냉전 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비평』 21(1), 204-225.
- _____. 1995. “동양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정문길 외(1995), 9-20.
- _____. 2000. “한국발 또는 동아시아발 대안? 한국과 동아시아.” 정문길 외(2000), 40-54.
- _____. 2004. “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2004), 9-24.
- 최원식 · 백영서 편.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태욱 편. 2009. 『신자유주의 대안론』. 파주: 창비.
- 하영선 편. 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한경구. 1996. “동아시아적인 것을 찾아서?” 『문학과 사회』 36, 1716-1741.
- _____. 2000. “동아시아의 경영 문화: 가능성과 한계의 모색.” 정문길 외(2000), 355-382.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2005.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서울: 박영사.
- 한용섭 외. 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 한용섭 · 홍기준 · 이상수 · 이규원. 2010. “동아시아 영토문제 극복을 통한 평화공동체 추진방안.”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현대』 1, 26-49.
- _____. 1998. 『탈근대와 유교』. 서울: 나남출판.
- _____. 1999.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183-242. 고양: 전통과 현대.
- Balassa, Bela.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llen & Unwin.
- Berger, Peter L. 1983. “Secularity: West and East.” 일본 국학원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1988.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in Peter L. Berger and Hsin-Huang Michael Hsiao, eds.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 3-1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heong Inkyo. 1999.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Dirlik, Arif. 1996. "Chinese History and The Question of Orientalism." *History and Theory* 35(4), 96-118.
- _____. 1997. *The Postcolonial Aura: Third World Critic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Grieco, Joseph M. 1993.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avis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as, Ernst B. 1958.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1. "Intern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5.
- _____. 1964.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9. *Tangles of Hopes*. NJ: Prentice-Hall.
- Kahn, Hermann. 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atzenstein, Peter J. 1997.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1-44.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3.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84. *After Hegemon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CO: Westview.
- _____. 1993.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in Davis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5.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and Integration."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International Politics*, Vol. 8 of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363-414. Reading, MA: Addison-Wesley.
- Kwack Sung Yeung,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2003.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 Market Issue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Moon Woosik and Yeongseop Rhee. 1999. "Asian Monetary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6(1), 33-49.
- _____. 2008.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Moon Woosik, Yeongseop Rhee, and Deok Ryong Yoon. 2000. "Asian Monetary Cooperation." *Economic Papers* 3(1), 159-93.
- _____. 2006.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Nye, Joseph S. 1968.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2(4), 855-880.
- Park Inn Won. 2009.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Asia Economic Journal* 23(2), 169-94.
- Pempel, T. J. 2004. "East Asian Regio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Korean Peninsula, Taiwan and East Asia: Recent Developments and Prospects', held at the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March. http://www.glocom.org/opinions/essays/20040405_pempel_east (검색일: 2011. 4. 4).

Abstract

Review of the Discourses on East Asian Community

Seung Woo Park Yeungnam University

Since the early 1990s, many Korean schola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ve been engaged in the discussions on East Asia, such as on the issues of identity or community. Altogether, they form what can be called the 'discourse of East Asia,' which is divided into four groups: the 'economic community discourse,' 'political and security discourse,' 'East Asian identity discourse,' and 'alternative social order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arguments of each discourse, and identifi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each of them.

This study also suggests a new type of discourse of East Asia, which I have termed, 'East Asian Community discourse.' It is based on various differing perspectives on the scope and meaning of 'East Asia'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on the methods of creating a regional identity or building a regional community. One of the purposes of this endeavor i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scholars of various disciplines, engaged in the study of the discourse of East Asia.

Keywords | East Asia, discourse of East Asia, East Asian regionalism, East Asian community, East Asian identity